

Global Management Insight

2005. 2

21세기 세계정치속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21세기 세계정치속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EXECUTIVE SUMMARY

I. 패권국가로서 중국의 재등장

- 중국은 18세기 중엽까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유럽을 압도하는 패권국이었으나, 중앙집권적인 체제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패권국에서 점차 몰락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 들어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이 다시 패권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China Threat 論) 중국이 시장성과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후, 군사력과 정치력까지 확보하여 패권국가로 재등장한다는 주장
 - (Paper Dragon 論) 부정부패, 지역간 갈등심화 등 체제붕괴요인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견제로 인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

II. 미국과 중국간의 국력비교

- (정책) 미국은 자국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패권국의 등장도 허용하지 않음
 - 미국은 대상에 상관없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패권국의 등장을 허용치 않음
 - 중국의 국력은 GDP, 경제력, 군사비 등 전반적인 국력차원에서 미국의 1/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에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함
 -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민족 간 대립,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통제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소가 내재해 있는 상황임
- (군사력) 중국의 군사력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크게 열세임
 - 2003년 미국의 국방비는 3,800억 달러로 중국의 600억 달러에 비해 6배 수준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질적인 차원에서도 미국은 초정밀 폭격, 최신예 전폭기, 최신예 보병무기들을 갖추고 있어 타국보다 1, 2세대 앞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

III.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 가능성

- 향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심각한 패권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군사력을 갖추어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고자 결국,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패권경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자유기업원 이훈근 부원장이 현대경제연구원 「미래기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21세기 세계정치속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 그러나, 중국은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아 패권국이 되기에는 자체경쟁력이 취약하여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 이외에 미국에 대항할 패권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함
 -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였고,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은 과거의 어떤 국가들보다 강력한 지배력을 즐기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힘의 정치(Power Politics)’라는 미국의 외교정책 하에 기반하고 있어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IV. 시사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선의 선택

- 향후, 중국은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거나 동등한 위치의 강대국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임.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민주화 과정을 순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혼란도 원하지 않음
 - 최근 한국인들에게 親中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동급의 독립국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변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 또한 세계열강 중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가 중국이며,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혼란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不遘不亂’을 對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써 삼고 있음
-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함
 -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을 한국에서의 전쟁발발보다도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의 핵 위협 감소로 인해 중국의 북한점령을 용납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한국은 시급히 미국과의 동맹을 다방면으로 강화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직접 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1. 패권국가로서 중국의 재등장

○ 중국의 흥망

- 18세기 중엽까지 중국은 군사력, 경제력에서 유럽을 압도했던 세계의 패권국이었음(<표1, 2> 참조)
 - 예를 들어,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유럽의 대표적인 함선인 콜럼버스의 세인트마리아호의 선체 길이가 30m이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함선인 鄭和 艦隊(1405-1433)는 寶船 길이가 120m에 이르는 거함이었음
 - 경제력에서도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였음

<표 1> 16세기 중국과 유럽의 국력비교

구분	중국	서양
인구	1억~1억 3,000만 명	5,000~5,500만 명
철강생산량	125,000 톤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도달한 수준
육군	100만 명 이상	유럽봉건제도하의 소규모 기사군
해군	1,350 척(길이 120m의 거함 400척 보유)	-

<표 2>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발달

구분	1750년	1800년	1830년	1860년	1880년	1900년
United Kingdom	1.9	4.3	9.5	19.9	22.9	18.5
France	4.0	4.2	5.2	7.9	7.8	6.8
Germany	2.9	3.5	3.5	4.9	8.5	13.2
Russia	5.0	5.6	5.6	7.0	7.6	8.8
United States	0.1	0.8	2.4	7.2	14.7	23.6
Third World	73.0	67.7	60.5	36.6	20.9	11.0
China	32.8	33.3	29.8	19.7	12.5	6.2
India/Pakistan	24.5	19.7	17.6	8.6	2.8	1.7

자료 : Paul Kennedy, 1987, p.149

주 : 음영은 세계 패권국을 의미함

- 그 후, 중국은 지나친 대륙중심의 중앙집권화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었음
 -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를 지향한 중국의 권력구조는 해안의 경제력 집중을 통한 신흥 부자들의 발달을 용납하지 않았음
 - 이에 비해 서양은 분권화 구조와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기술력, 경제력, 군사력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세계해양을 장악하고, 세계의 覇者로써 부상함과 동시에 세계 정치·경제의 주역이 됨

21세기 세계정치속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 중국의 패권국 재등장에 대한 두 가지 주장

- 역사상, 세계패권경쟁은 2강 체제로 전개되어 왔음(<표 3> 참조)

<표 3> 역사상 강대국들의 패권전개

구 분	강대국들의 패권전개	
1495~1540	포르투갈	vs. 스페인, 프랑스, 영국
1560~1609	스페인	vs. 네덜란드
1610~1648	Hapsburg	vs. 30년 전쟁
1650~1713	프랑스	vs. 영국
1792~1815	프랑스	vs. 대영제국, 프러시아, 러시아
1871~1914	독일	vs. 연합국(영국, 프랑스, 미국)
1933~1945	樞軸國	vs. 연합국(영국,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1945~1990	미국	vs. 소련
1990~현재	미국 패권시대	

- 현재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존재
 - 최근 중국이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패권국가로서 재등장하는 가능성에 대해 “중국위협론(China Threat)”과 “종이용론(Paper Dragon)”등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중국위협론) 중국이 위협적인 패권국가로 재등장할 것이라는 주장
 - 중국이 시장성과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함
 -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뒤, 정치력까지 확보하여 패권국가로 재등장한다는 주장
 -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며 과거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중국의 대외정책은 매우 공격적인 성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
- (종이용론) 이에 반해, 중국은 내부적인 문제와 미국의 견제로 인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
 -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아시아 경제선진국들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쳐야 함
 - 또한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의 심각한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극빈층의 위화감 증대, 이기주의적 성향의 ‘小皇帝’ 계층의 대두,

2 • 현대경제연구원

II. 미국과 중국의 국력비교

- 지역 간 갈등심화 등과 같은 여러 체제붕괴의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여기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대국 미국의 견제와 미국 편에서 중국 견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모습은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II. 미국과 중국의 국력비교

○ 정책

-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대륙에 패권국이 들어서서 는 것을 절대 허용치 않는 것임
 - (Zbigniew Brzezinski)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일시적인 탈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역사적인 대립관계이다.”, “이것은 전 세계를 담보로 하는 두 제국간의 역사적 충돌이기 때문이다”(Game Plan(1986)에서 인용)
 - (Gorge F. Will)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은 불길하게도 100년 전, 독일의 ‘힘의 중대’와 유사하다. 과거의 문제는 두 번의 끔직한 전쟁으로 해결되었지만 중국문제는 국제협상을 통해 말의 안장에 중국을 꽂고 묶는 것과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Big Dragon(1988)에서 인용)
 - 위와 같이 미국은 항상, 대서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이 외교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패권국이 들어서 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그 대상이 독일이던, 중국이던, 일본이던 상관없다는 입장임
- 한편, 중국은 과거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
 -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평등할 때, 질서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인간관계가 평등하면 ‘금수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는 위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天下로 생각하고, 중국이외의 국가들은 단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邊方이라고 생각함
 - 이는 중국의 국제정치관이 진시황제(漢나라)이후 내려온 ‘中國의 世界秩序’라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

21세기 세계정체속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 아직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국력열세에 있음
 - 현재 중국의 국력은 미국의 1/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미국에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함(<표 4> 참조)

<표 4> 미국과 중국의 국력비교

구분	중국	미국
면적	9,596,960 sq. km	9,631,418 sq. km
인구	1,298,847,624(2004년)	293,027,571(2004년)
경제성장	9.1% (2004년)	3.1 % (2004년)
GDP/일인당	5,000 달러	37,800 달러
GDP/ppp	6조 4,490억 달러	10조 9,900억 달러
GDP	1조 2,660억 달러	10조 383억 달러
Internet Host	160,421	115,311,958
군사비	600억 달러(2003년)	3,707억 달러(2003년)

자료: CIA World Fact Book(2004), World Bank(2004)자료

주: GDP/일인당은 PPP 평가 기준

○ 군사력

<표 5> 국가별 국방비 총액

주요 내용 (2003년)	비용
전 세계 국방비 총액	7,500억 달러
미국 국방비 총액	3,800억 달러
미국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470억 달러
미국 정보예산	300억 달러
프랑스 국방비 총액	350억 달러
중국 국방비 총액	600억 달러
한국 국방비 총액	130억 달러

- 미국은 중국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03년, 미국의 국방비는 3,800억 달러로서, 이는 전 세계 국방비 7,500억 달러 (세계총생산량의 3.5%)의 50.7%에 이르는 수치임
 - 군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는 470억 달러로서, 이는 전 세계 군사관련 연구 개발비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표 5>참조)
 - 이와 관련해 중국은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17%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방비 총액(2003년 기준)이 600억 달러로서 아직 절대적인 수준에서 미국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III.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 가능성

- 미국 Washington Post지의 Dana Priest 기자는 그의 저서 *The Mission*에서 2002년,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이 10배 강하다고 저술함

-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타 국가 보다 1, 2세대 앞선 군사력을 보유함

- (초정밀 폭격) 미국은 하나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에서는 8,000발의 폭탄을, 월남전에서는 300발의 폭탄을 사용했으나, 이라크 전에서는 원하는 표적을 단 1발의 폭탄으로 파괴할 수 있는 JDAM 폭탄을 선보임
- (최신에 폭격기) 스텔스 장치가 장착된 B-2 Spirit의 경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 이라크를 폭격하고 다시 미국에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최강의 보병사단) 이라크에서 미국은 육군 1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공수부대 1개 사단, 총 3개 사단 만을 투입하여 승리하였는데 이는 세라믹으로 만든 방탄복, 나이트비전 고글 등 신형 무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III.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 가능성

○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 발생가능성

- 미국과 중국 간에는 심각한 안보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국은 당분간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어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고자 할 것임
- 이것은 중국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는 뜻은 아니며, 국가생존을 위한 가장 좋은 생존보장 장치가 패권추구이기 때문임
- 이에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는 심각한 안보경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미국과 중국의 갈등원인은 문명과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임

- 앞으로 강대국 간의 갈등은 문명권 간의 갈등이 될 것임
- 중국은 미국의 논리를 이해 못하고 미국 역시 중국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함
- 두 나라의 국제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임

21세기 세계정치속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 패권경쟁 시, 판도변화의 예측

-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급상승 하더라도 패권판도는 미국의 우세 하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아,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이 되기에는 아직 자체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임(<표 6> 참조)
- 한 예로 “한국의 최대수출국은 중국이지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의 70-80%는 미국이 최종중착지이다”라고 Jeffrey Jones(2004년 10월)가 언급함

<표 6> 주요 국가들의 경제 대외의존도

국가	수출	수입	의존도(%)
미국	9.8	13.8	23.6
중국	28.9	25.9	54.8
일본	11.1	9.9	21.0
독일	35.5	31.5	69.1
캐나다	43.8	38.2	82.0
한국	35.3	33.8	69.1

-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주변 국가들이 미국을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 일본과 영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면서 중국견제를 거두고 있음
- 미국·영국·일본 동맹의 경제력이 2002년도 기준, 약 18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경제력은 약 6조 달러에 불과해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나 유럽이 미국의 독주체제를 저지할 가능성은 낮음

○ 중국이외에 미국에 대항할 패권국의 등장 가능성

<표 7> 국가별 GDP 변화현황 (단위: 억 달러)

국가	1992년	2001년	증감(%)	2002년
미국	67,493	90,395	33.9	103,831
프랑스	15,122	18,123	19.8	14,312
독일	23,871	27,109	13.1	19,840
이태리	10,523	12,256	16.5	11,842
영국	10,285	13,349	29.8	15,662
러시아	4,418	3,669	-17	3,465
일본	51,314	56,515	10.1	39,934
중국	4,959	11,136	124.6	12,660

* 자료: World Bank 2004.4

주: 증감은 1992년→2001년 변화임

IV. 시사점: 한국의 선택!

- 미국의 패권유지는 막강한 경제력 기반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각종 경제성장 지표에서 세계 1위를 독차지하며 냉전시대 종식 이후, 10년 동안 사상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표 7> 참조)
- 당분간 미국에 대항할 패권국가의 등장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였고,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통일이 필요하며,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생력의 문제를 해결해야함(Zbigniew Brzezinski, *The Choice*, 2004)
 - 따라서 뉴 밀레니엄 시대에 미국은 과거, 어떤 지배 국가들보다도 강력한 지배력을 즐기고 있음(Henry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2001)
 - 역사적으로 국제정치는 군사력, 경제력에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힘의 정치(Power Politics)'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도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함

VI. 시사점: 한국의 선택!

- 향후, 중국은 미국보다는 일본과 비슷한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모택동' 시절, 중국은 '세계중심 국가로서의 중국'을 추구했으나, '둥소평' 집권 이후 '국제정세변화 속에서의 중국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너무 강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거나 동등한 위치에 이르기보다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임
-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혼란도 원하지 않는 국가임
 - 최근 한국 내에 親中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중국은 독립국으로서 한국보다는 군신의 관계인 변방국가로서 한국을 대해 왔음
 - 따라서 한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혼란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 '不通不亂'을 對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아 한반도통일을 가장 원치 않는 국가로 평가되어 왔음
 - 만약, 북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에 의해 통일될 경우, 중국의 방위비 증가가 요구되기 때문임
 - 결국, 한반도의 긴장이 유지될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 한국과의 교섭력, 미일동맹에 대한 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음

21세기 세계정치속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선택?

-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자국의 이익추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존 볼튼 미 국무부 군비통제 담당 차관보는 2003년 8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만 혹은 일본의 핵 개발을 막지 않고 방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함
 - 이에 중국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이 향후 동아시아 패권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여 북한통제를 위해 '김정일 제거' 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한편,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줄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티벳화 하여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를 원하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한반도 통일문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선택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임**
 - 미국은 한국과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략적 동맹관계로써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문제를 추진해 왔음
 - 그러나, 부시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David Frum과 Richard Rerle은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2003)이란 저서에서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폭탄이 한국에서의 전쟁발발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함
 - 이에 북한의 핵무기시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 결국,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은 '한반도 통일의 요원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직접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춘근(02-3774-5003, lck@cfе.org)